남과 북의「기묘한공존」

- 현재 예측 가능한 일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日本 케이오(慶應)大教授

남북관계의장래에 관해서는냉전 종식 이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논의되어왔다. 특히 오는 6월 12~14일에 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어평화공존을향한 첫걸음이 시작됨으로써, 남북관계에예측 가능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 과연 어떠한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새로운 남북관계는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수락했는가에대한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장래의 남북관계를예측하기가거의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북한은 왜 정상회담을수락했는가?

북한이 정상회담을수락한 최대 이유중의 하나는 교착된 미사일 교섭,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정권탄생 가능성 등 대미외교의난항을 들 수 있다. 북미 미사일 교섭 타결 가능성이 높고,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없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받아들일 가능성은거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 3월 뉴욕 북미회담이타결되고 계획대로북한 고위장성의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남북정상회담은실현되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북한 고위장성이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은아직 남아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재개되는미사일 교섭의 전망은 북미 쌍방의 기본적 입장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밝지 않다. 또한 공화당정권이탄생해서 지금까지의유연한 대북정책이폐기된다면제네바 교섭 이후의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질지도모른다. 나아가 군사 위기라도발생하면, 북한 자체의 생존조차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개최해서 남한과 교류 · 협력을하게 되면, 부시정권이탄생하더라도미국은 지금까지의정책

2002년은 김정일 위원장의 환갑이라는 소위 '영광스런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몰락한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이외에 북한을 적극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지도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신정권의 대북정책을 조금이라도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 수 있다. 김일성 사후 1995~97년의 3년간이 북한 경제 최악의 시기였고, 식량위기도 극에 달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의 조짐은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에너지와 원자재가 크게 부족하여 공장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대부분의 산업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외부에서 대규모적인 원조가 없으면 금년에도 유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작년 말 이후의 가뭄이 계속되거나 여름에 호우라도 엄습하면 다시 최악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파멸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물론, 정부기구와 공장, 관리부문의 조직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실리'를 중시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다. 또 김일성의 '주체농법'도 수정하여 적지적작(適地適作), 이모작, 감자재배, 품종개량 등이 장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이전에 비해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다는 엄연한 현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02년은 김정일 위원장의 환갑이라는 소위 '영광스런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몰락한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이외에 북한을 적극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세 번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 내지는 지도력 강화이다. 북측이 남한의 총선거 투표일 직전에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은 단순히 김대중 정권의 총선 승리에 공헌하여, 커다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포용정책에 대한 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의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포용정책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김대중 정권을 도우려 한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김정일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경제적 상호 의존

이상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북측이 정상회담을수락한 이유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이후 전술 차원에서사소한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새로운 남북관계의형성이라는큰 조류는 적어도 1~2년은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의 대북정책이결정되기까지는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김대중 대통령의임기가 끝나는 것은 2년 반 후의 일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규모적인경제 원조가 시작되려면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남측에서북측으로 최소한 몇십만 톤의 비료와 석탄이 제공되고, 식량과 전력도 제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은 그 다음해에도원조가 계속되기를바랄 것이다. 또 그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되면, 한국으로서도쉽게 북한에서 철수할 수 없게 된다. 남북 최고지도자회담은그 자체만으로도역사적인의의가 매우 크지만, 50년간 단절되었던남북한 경제교류가활성화되어과거 냉전시대로되돌아갈수 없게 된다는 점도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간의경제적 상호의존의심화는 당연히 정치와 안전보장에도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관점에서볼 때,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는 북측에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수도 있다. 김정일이 의도하고있는 것은, 일시적으로한국의 힘을 빌려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것이지, 영원히 한국에 예속되는것은 아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자립적인경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으로부터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면, 과연 북한 내부의 사회적인동요는 일어나지않을 것인가, 외부 정보가 유입될 경우 북한은 경제 재건과 정치 안정을 양립시킬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인안목에서보면 그것이 체제 변질을 촉진시키는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북한 입장에서우려되는대목이다.

남한 입장에서도대북 경제지원은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중동 특수를 훨씬 능가하는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말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상당 규모의 차관과 신용을 제공하지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전제되지않으면 국제기관이나외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기어렵다. 또한 이 문제는 국가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무리하게 실행에 옮기면,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갖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는한나라당의강한 반발을 초

남북 최고지도자회담은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지만, 50년간 단절되었던남북한 경제교류가활성화되어 과거 냉전시대로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점도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심화는 당연히 정치와 안전보장에도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래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대북 경제지원은 한국의 중요한 국내 문제이기도하다.

물론 북측이 경제 이외의 문제, 즉 정치, 외교, 안보, 인도적인 문제 등에서 남측에 양보하게 되면, 한국 국민의 이해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은 한층 경감될 것이다. 이상의 의제 중에서, 북측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인문제, 즉 이산가족의재회, 스포츠, 예술 교류 등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은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양보는 거의 기대하기어려울 것이다.

경제협력과 정치대립의 기묘한 공존

상술한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조국통일3대원칙 의 재확인과예비교섭에서의의제 합의 난항, 즉 '근본적인문제 '에 대한 집착에서 입증된 바 있다. 남북간의 경제 경쟁에서 패배하여, 한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지않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정치분야에서그에 맞먹는 명분을 쌓아두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런 것이 없다면 북한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볼 때, 그러한 정치적 주장은 북한 국가체제의특징, 즉 '경제적인취약성과 정치적인 강인성 '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7 · 4공동성명을채택할 당시와 똑같이, 북측은 남측에 3대 원칙에 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1원칙인 ' 자주는 한 · 미 · 일 3국공조체제 '와 미군의 한국주둔에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또 제2의 '평화 '원칙에 의거하여, 북측은 상호불가침과군사적인 신뢰조치뿐만아니라, 군비 축소, 병력 삭감, 군사 연습 중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더욱이 제3의 '민족대단결 '원칙을 근거로, 북측은 국가보안법의폐지, 국가정보원의해체, 한총련에대한 규제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협력과정치적 대립의 공존 '은 실로 기묘한 것이

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사회주의 진영의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김일성 주석이 이미 종래의 '연방제통일론'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 남북 공존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 92년에 걸쳐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미 체결·비준되어 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김정일에게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은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정치,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양보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격론을 주고받을 것도 없이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정의되어 있으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본합의서는 정치, 군사, 교류, 협력의 각 분과위원회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기본합의서를 재확인만 하면, 이러한 각 위원회는 즉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각 위원회에 중앙정부의 기능을 부여하여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92년 9월에 맺어진 '남북의 협력, 교류의 이행과 엄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내용도 놀랄 정도로 대범하고 상세하다. 예를 들면, 그 제1조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지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자원의 공동 개발과 경제협력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보장, 2중과세방지, 분쟁조정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또 제3조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김정일에게 단순한 정치 선전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장래 실천을 위한 행동 규범으로 인식될 것이다.

남북협력과 한·미·일 공조의 틈새

미일 양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 북미교섭이 진전되고 있는 동안, 미국 정부의 최대의 고민은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점이었다.

일본으로서도, 북일 교섭이 재개되었지만남북 대화가 두절된 상태로는 유리할 게 별로 없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안전보장과테러리즘의문제를 접어 둔 채, 경제분야를중심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키면한 · 미 · 일공조를 혼란스럽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렵게 출발한 페리 보고서의 실행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한쪽에서 한국이 대규모적인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개발, 미사일 개발, 그리고 테러리즘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미일 양국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협력하기 위해서도 핵개발, 미사일개발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해서 북한의 양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경제협력을 계기로 이러한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고, 한 · 미 · 일공조 틀 속에 남북협력을 진행해 가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김대중정권에있어서 최대의 난제 중 하나는 남북협력과 한 · 미 · 일 공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미일 양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에협력하는 것은, 곧바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안문제의 해결없이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미일 양국의 협력이 없다면 한국정부도충분한 대북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이상으로북한의 입장도 어렵게 된다. 즉, 미일 양국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반대하지는않지만, 그것에 협력하기위해서도 핵개발, 미사일 개발 그리고 테러리즘에관해서 북한의 양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경제협력을계기로 이러한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고, 한 · 미 · 일공조 틀 속에 남북협력을진행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기본합의서뿐만아니라 동시에 발효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재확인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재개시키는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미일 양국도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에 협조적으로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 행방불명자의 안부가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에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문제에 양보하지 않는다면서두를 이유가 없다. 페리 보고서에따라 한보 한보 전진해 가면 되는 것이다. V&S

(日語原文 번역 : *V&S* 편집진)